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79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auri)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도시정책동향 Vol.79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2년 3월 7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이종민, 방보람, 장창희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68
이메일 brba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Contents

Vol.79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안부,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국토부, 코로나 음압병상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 도입

제주도,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통해 도민불편 해소

8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행복청, 22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 발표

부산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 국토부 최종 승인

인천시,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확정

대구시, 2022년 대구의 교통환경 이렇게 달라집니다

울산시,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확정

경기도, 도 주도 최초의 10개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13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환경 · 인프라 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

환경부,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를 찾습니다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제공

국토부, IBK기업은행, 가로주택정비 지원을 위한 금리 2.9% 수준 대출 시행

행복청,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국토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국토부, 3080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0만호 발굴

부산시,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자치구·군 대상 정책공모 실시
부산시, 태양광 설치 친환경 학교,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승인
부산시, 전국 최초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추진!
강원도,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캠프페이지 부지로 확정
경남도,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곳, 청년친화도시를 찾습니다
충북도, 도시숲 대폭 확충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일대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26

국토부,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한다
국토부, 광주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2개월 간 구성·운영
행안부, 정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운영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통합 활용체계 개선 2단계 사업완료
울산시, 2022년도 토지정보 주요업무 추진계획 확정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2022년 1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건축 정책 | 국토 정책 | 주택 정책 | 도시 정책 | 환경 | 안전 | 문화 관광

국토부, 「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시정책과. 2022.01.10.

국토 정책 | 주택 정책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허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과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생산관리지역의 입주업종 확대	-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 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 등 입주업종 추가 확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 추가 부여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 3기 신도시 조성 등 골재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구역 계획을 제안 시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 면제

국토정책 주택정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미가입시 등록말소사유 구체화,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오피스텔 등록 면제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	- 시장·군수·구청장의 3회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구에도 미가입시 등록말소 가능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 -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 마련
기타	-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전용면적 확대(85㎡→120㎡)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항목 신설, 임대료의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값의 변동률 적용 등의 내용 보완

행안부,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안전개선과. 2022.01.11.

국토정책 도시정책 안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국토부, 코로나 음압병상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도시정책과. 2022.01.24.

도시정책 건축정책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압병상 설치를 위한 용적률 혜택 부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1월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코로나 음압병상 확충	- 감염병관리시설(음압병상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 - 음압병상 증축 및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설치한 음압병상에도 용적률 혜택 부여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녹색건축과. 2022.01.28.

건축정책 환경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EPI)를 정비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1월 2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 간소화	-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했던 중복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혜택 부여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	-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하여 열손실방지(단열 등) 조치 개선 - 바닥단열 시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관련 성능 유지를 위해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소방관진입창, 방화문)에 대한 단열기준 개선
EPI 평가항목 등 정비	-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비주거용 일괄소등스위치 등)을 선택 적용하도록 개선 -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의 삭제, 일부 유사 항목의 통·폐합, 건축물에너지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 필요 항목 신설 등 EPI 항목을 일부 정비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공정건설추진팀. 2022.01.27.

건축 정책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과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하였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 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 도입

건축기획과. 2022.01.03.

건축 정책

서울특별시가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현행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상에서 공개공지(공간) 설치 장소를 '실외'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는 면적·높이 등 '실내용 공개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실내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실제 설치 사례가 없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실내형 공개공간' 정의와 건물 면적에 따른 최소 면적, 높이, 폭 등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 12월 30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3단계(대·중·소규모)로 구분해서 최소 폭과 높이 규정을 설정했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소규모 (실내형 공개공간 면적 150㎡ 이상)	- 최소폭 : 6m 이상 - 최소높이 : 층수 2개층 이상
중규모 (실내형 공개공간 면적 500㎡ 이상)	- 최소폭 : 9m 이상 - 최소높이 : 층수 3개층 이상
대규모 (실내형 공개공간 면적 1000㎡ 이상)	- 최소폭 : 12m 이상 - 최소높이 : 층수 4개층 이상

제주도,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통해 도민불편 해소

교통정책과. 2022.01.06.

도시 정책 환경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그간 신차에만 적용된 차고지 사전 신청제도를 중고차 이전 등록까지 확대해 도외지역에서 중고차 이전 시 도민 불편을 해결했다. 도외에서 운행하는 도민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해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은 저소득층의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 한정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확보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조례상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이 달라 용도변경에 곤란을 겪을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데도 법정 주차대수 확보가 여의치 않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을 2분의 1범위까지 완화하도록 조치했다.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건축정책 국토정책 주택정책 도시정책 환경 안전 문화관광

행복청, 22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 발표

도시공간건축과. 2022.01.10.

국토정책 도시정책 주택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2년은 산울리(6-3생활권), 합강리(5-1생활권), 집현동(4-2생활권), 고운동(1-1생활권) 등 4개 생활권에 총 7027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집현동(4-2생활권), 어진동(1-5생활권), 소담동(3-3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해밀동(6-4생활권), 고운동(1-1생활권) 등 5개 생활권에 총 3998호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다.

공급물량은 공공분양(산울리 M4), 민간분양(집현동 H3, 합강리 L9·L12), 도시형생활주택(산울리 UR3, 집현동 UR),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주택 4142호와 행복주택(산울리 M1·M4·UR1·UR2, 합강리 L13), 국민임대(산울리 L2), 민간임대(산울리 L2) 등 주거복지를 고려한 임대주택 2885호로 구성된다.

준공물량은 공공분양(집현동 M5), 신혼희망타운(집현동 M3), 민간분양(어진동 H5·H6, 해밀동 B1) 등 분양주택 2085호와, 국민임대(소담동 M2), 공공지원민간임대(반곡동 H1·H2, 고운동 B10·B11) 등 임대주택 1913호로 구성된다.

부산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 국토부 최종 승인

도시철도과. 2022.01.18.

국토 정책 도시 정책

부산광역시는 1월 18일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계획은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17.6.) 후 그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타당성을 재분석한 현실적인 계획으로,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철도 서비스 제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광역철도와의 네트워크 기능 강화 등 도시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을 구현하기 위해 수립됐다.

국토부의 변경계획 승인에 따라, 10개 노선(92.75㎞ 신규 4개, 기존 6개)이 도시철도망 구축 대상노선으로 확정됐다. 이번 변경계획에 반영된 대상노선이 모두 건설되는 2036년에는 도시철도 수단분담률이 기존 11.04%→14.08%로 3.04%P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분 이내 도시철도역으로 접근 가능한 행정동이 128곳→152곳으로 늘어 평균 접근시간이 기존 9.06분→7.25분으로 1.81분 단축되고, 도시철도 역세권 인구도 기존 82.8%에서 88.0%로 5.8%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확정

철도과. 2022.01.18.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인천광역시는 부평연안부두선 등 8개 노선이 반영된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변경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부평연안부두선, 송도트램,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주안송도선, 영종트램,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제물포연안부두선 등 8개 노선으로 총 87.79㎞ 길이의 철도망 건설에 2조 8,6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은 2016년에 수립된 기존계획에 대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타당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수혜 확대, 원도심 도시 재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에 반영된 노선이 모두 건설되면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 증가로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2022년 대구의 교통환경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통정책과. 2022.01.05.

국토 정책 도시 정책

대구광역시는 고령화, 저출산, 비혼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이후 교통 및 통행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따른 맞춤형 교통정책,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교통인프라에 접목한 교통혁신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대구의 미래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분	주요 내용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사고 30% 줄이기 VISION 330 시즌3 추진 - 걷기 좋은 보행자 중심 도로 조성
탄소제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활성화	- 친환경 시내버스·택시 도입(2022년 사업비 240억원 투입) - 택시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112 자동신고시스템 등) - '대중교통 마일리지제' 전국 최초 시행
수요자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	- 서대구 고속철도역 개통('22년 3월경 예정) -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본격 추진 - 사통팔달의 핵심인 '대구4차 순환선' 완공 - 서대구 톨게이트 주변 구조 개선 및 범안로 통행료 인하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 첨단 교통관리체계 구축·운영 -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추가 개방 - 스마트 안심 횡단보도 설치

울산시,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확정

관광진흥과. 2022.01.18.

국토 정책 도시 정책 문화 관광

울산광역시는 '해양, 산악, 산업, 역사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하는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을 확정, 1월 1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5년(2022년~2026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형 생태관광 기반(인프라) 확충, 최적의 스마트 관광 기반구축, 체류형 관광거점 개발, 울산권만의 관광 매력 발굴, 생태관광도시 울산 인식 제고, 경쟁력 있는 울산권 관광생태계 조성 등의 6대 전략이 마련됐다.

이 같은 전략 아래 관광개발(11개), 관광진흥(10개), 관광단지(1개) 등 3개 분야에 22개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중장기 과제(사업계획 보완 후 반영)로 7개 사업을 두었으며, 사업비는 총 2조 888억 원(민간자본 1조 6,532억 원, 공공예산 4,356억 원)이 책정됐다.

중장기 과제로 해양중심관광지 조성, (가칭)울산관광단지 조성, 서생해양관광단지 조성, 남산 울산전망타워, 강동온천지구 조성, 한글역사문화특구 지정 및 활성화, 울산권 종교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이 검토된다.

울산시는 이번 관광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 및 각 구군,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추진체계 구축, 국비를 비롯한 연차별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기도, 도 주도 최초의 10개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하천과. 2022.01.12.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경기도는 1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그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 주도 최초로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이다. 그동안 권역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군, 도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을 완성했다.

이번 계획은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단순 하천 폭 확장과 제방 확충 등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 미관, 생태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하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①안전을 최우선 하는 경기도 '안전하천' ②건강하고 쾌적한 경기도 '친수하천' ③맑은 생명이 흐르는 경기도 '생명하천' ④시대변화와 균형 발전하는 경기도 '균형하천' 총 4대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경제성, 홍수위험성, 효율성, 형평성 4가지 항목을 중점 검토 기준으로 설정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특징이다.

건축 정책 | 국토 정책 | 주택 정책 | 도시 정책 | 환경 | 안전 | 문화 관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환경 · 인프라 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

입지총괄과. 2022.01.03.

국토 정책 | 도시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일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의 사업들을 일괄 공고하였다.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을 일괄적으로 공고함으로써 사업 수요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는 산업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5개 부처의 20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정부는 '22년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약 5,000억원 규모(구조고도화사업 '22~'24년 총사업비 2,000억원 포함)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운영 방식을 '1년 단위 선정'에서 '2~3년 단위 선정'으로 개편하였고, 이로 인해 금년에는 총 60여개의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 등의 지원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지 내에 복수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원(生生프로젝트)하는 방식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환경부,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를 찾습니다

녹색전환정책과. 2022.01.05.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환경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 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하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본보기(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하여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범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제공

시설제도기술과. 2022.01.14.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 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한다.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내부만 지정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였다.

국토부, IBK기업은행, 가로주택정비 지원을 위한 금리 2.9% 수준 대출 시행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1.21.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을 신설('18~)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은 1월 20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연 이자율 2.9%('22년 1월 기준)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연 이자율 2.9%('22.1월 기준)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90%)이 가능하며, HUG에서 사업비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 실행까지 약 1~2개월 소요)

또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며,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가 적합한 자금 조달방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행복청,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공공건축추진단 박물관건립팀. 2022.01.24.

건축 정책 문화 관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립박물관단지 내 건립 예정인 '국립디자인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디자인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의 박물관 중 하나로 세종시 세종리(S-1생활권) 문화시설용지에 부지면적 1만2157㎡,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2021년 9월~12월(3개월) 동안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여 총 24개의 작품을 접수하였고, 1월 12일 1차 심사에서 5개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최종심사에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응모업체의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최종 당선작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은 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와 스와(sswa)건축이 공동 출품한 작품으로,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에 충실하면서도 회랑의 연속적 동선계획과 마당의 중첩 배치 등 한국의 전통 건축요소를 잘 표현하였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을 받았다.

[당선작: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

국토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사업총괄과. 2022.01.26.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1년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 '22년은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증가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①기준점측량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하였고, ②「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120개 업체) 선정을 지난해 말까지 미리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각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민간대행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 3080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0만호 발굴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2.01.27.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21.2.4)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하여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역세권 8곳, 저층주거 3곳)으로, 총 1만호 규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연번	구역명	면적(㎡)	공급호수
1	수락산역 인근	2.8만	698
2	대림역 인근	6.0만	1,610
3	고덕역 인근	6.1만	400
4	상봉역 인근	1.7만	512
5	봉천역 서측	0.8만	287
6	봉천역 동측	0.7만	305
7	번동중학교 인근	1.3만	293
8	중곡역 인근	1.8만	582
9	효창공원앞역 인근	7.8만	2,483
10	수원 고색역 인근	10.7만	2,294
11	수원 舊권선131-1구역	3.3만	695
계	11곳	43만	10,159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 개요]

부산시,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자치구·군 대상 정책공모 실시

도시계획과. 2022.01.02.

도시 정책

부산광역시는 오는 6월까지 ‘15분 생활권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5분 생활권, 디지털 스마트, 그린 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근린·복합생활권 2개 유형 16개 사업을 발굴·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240억 원(시비 930억, 구·군비 310억)이 투입된다.

공모 분야별 주요사업은 15분 생활권 분야에 문화·체육·복지·건강지원 시설, 공영주차장, 보행환경 개선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 사업, 디지털 스마트 분야에 ICT 기반 생활안전서비스 체계 구축,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조성 등 일상의 비효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사업, 그린 인프라 분야에 녹지공간 조성 및 환경기초시설의 다기능화, 물순환 체계 구축 등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견인 사업이 있다.

시는 4월까지 구·군에서 시민의견을 반영해 응모한 사업들을 접수하고, 5~6월에는 현장시찰과 민간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대 30억 원의 시비가 지원되는 근린생활권유형 11개 사업과 최대 120억 원의 시비가 지원되는 복합생활권유형 5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구·군을 통해 추진되며, 2~3년 내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정책공모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그동안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기초로 3대 분야 사업에 대한 공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부산시, 태양광 설치 친환경 학교,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승인

미래에너지산업과. 2022.01.19.

건축 정책 환경

부산광역시는 태양광으로는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외부사업)'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함께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교토의정서(1997년 제정, 2005년 발효)를 근거로 각 국가나 기업이 부여받은 탄소배출 할당량을 절감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매매하여 수익을 거두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7년 부산시교육청, 한국에너지공단,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와 '클린에너지 학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세부 사업으로 2018년부터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공급 전환을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학교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했다.

부산시 내 총 60개 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설치 학교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게 됐다.

외부사업 승인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추가적인 노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해야 하고, 등록된 방법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승인받은 학교는 해운대교육청 관내 12개 학교(반여초, 좌동초, 신진초, 대청중, 동백중, 양운중, 해강중, 신정중, 부산남일고, 부산동여고, 신정고, 센텀고)이며, 나머지 48개 학교도 올해 6월경 승인받을 예정이다. 또한, 60개 학교가 승인을 받아 탄소배출권을 매매하면 10년 동안 약 4~7억 원가량의 수익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밑거름으로 2022년까지 100개소 학교 옥상,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총 5MW(100개소×각 50kW)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산시, 전국 최초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추진

도시디자인과. 2022.01.20.

도시 정책 안전

부산광역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룸 밀집 지역인 금정구 장전동, 남구 대연동에 '여성친화형 1인가구 복합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기존 1세대 셉테드 사업 방식을 넘어, 주민과의 소통·교류와 민·관·산·학 협업을 중심으로 '혁신 스마트 셉테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2세대 셉테드 집약 사업이다.

2023년까지 사업대상지인 금정구 장전동, 남구 대연동 원룸 밀집 지역에 총사업비 110억 원이 투입되며, 혁신 셉테드 인프라 조성, 범죄 취약가구 방범시설 지원,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특화 등 4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원도,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캠프페이지 부지로 확정

회계과. 2022.01.04.

완료 도시 정책 건축 정책

65년이 경과된 강원도청사는 노후화됨에 따라 구조안전성 등의 문제로 그 동안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도청사 신축방안에 대하여 여러 방안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춘천시가 제안한 '캠프페이지 부지'를 도청사 신축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경남도,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곳, 청년친화도시를 찾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2022.01.08.

도시 정책

경상남도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서로 다른 여건을 가진 시군이 지역 실정을 감안한 청년정책을 발굴하면 경남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모 신청 대상 사업은 청년 참여·활동 촉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청년 권리보호, 청년 능력개발, 청년 문화 진흥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이다.

공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으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 실사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2개 시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최종 선정된 2개 시군은 자문단의 사업 컨설팅 및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군당 2년간 13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는다.

충북도, 도시숲 대폭 확충

산림녹지과. 2022.01.24.

도시 정책 환경

충청북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하기 위한 생활권 녹색기반 확충에 나선다. 충청북도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휴식공간 제공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 미세먼지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생활밀착형숲 등 5개 사업에 295억원을 투입한다.

구분	주요 내용
도시숲	- 생활권 내 다양한 녹색 휴게공간을 만드는 사업 - 도심 속 자투리땅이나 유휴지에 조성하는 녹색쌈지숲과 학생들의 녹색교육장으로 활용될 학교숲 등에 15억을 투입해 8개 시군에 11곳 조성하며,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과 도시 녹지의 중요한 연결 축인 가로수 조성에도 7억 투입
미세먼지차단숲	- 산업단지, 도심권 유휴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숲을 조성해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 - 청주, 충주, 제천, 영동, 괴산, 음성 등 7곳 조성(총 사업비 85억원)
도심바람길숲	-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에 있는 숲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만드는 사업으로 증평군 일원에 조성하게 되며 2단계 사업으로 90억 원을 투입해 8곳의 숲 조성 - 이와 함께 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충주시에 실시설계를 진행해 2025년까지 3년간 조성공사 추진
자녀안심그린숲	-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원을 들여 청주와 충주에 4개소 조성
생활밀착형숲	- 공공시설, 도서관, 역사 등 생활권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벽면녹화, 실내정원, 옥상·실외정원 등 다양한 녹색생활공간을 만드는 사업 -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청주, 제천에 실내정원 4곳과 청주, 제천, 영동, 괴산에 실외정원 9곳 등 총 13곳 조성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일대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디자인정책팀. 2022.01.05.

도시 정책 안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인 '안심마을 만들기'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월 5일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CPTED)은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의 6대 원칙에 따라 공간계획 및 시설 디자인을 범죄예방과 범죄 불안감 감소에 활용하는 범죄 예방기법이다. 앞서 제주도는 주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대상지 조사를 마쳤으며, 마을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태양광 벽부등, 바닥등, 비상시 경고음이 울리는 안심 비상벨, 폐쇄회로(CC)TV. 안심지도 표지판, 지킴이 쉼터, 바닥사인, 벽면정비, 간이 쉼터의자 설치 등이다. 이를 통한 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소통 기회 확대로, 밝고 쾌적한 안심마을을 조성해 애향심을 키우고 지역 공동체의식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태양광 바닥조명 설치사례(대정읍 하모리)]

건축 정책 | 국토 정책 | 주택 정책 | 도시 정책 | 환경 | 안전 | 문화 관광

국토부,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한다

국가공간정보센터. 2022.01.07.

국토 정책 |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공간빅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하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12월 31일부터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www.geobigdata.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이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형식과 분석절차 등을 표준화한 모델로, 유사업무를 수행할 때 표준화 모델을 적용하면 원하는 분석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어 ①비용절감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②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분석모델을 매년 개발해왔다. 올해에는 버스정류장 사각지역 분석, 화재취약지역 분석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교통, 생활, 안전 등 공공 행정·정책 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5종*을 개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등이 실제 업무에 활용 중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각 지역의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현하였다.

* ① 버스정류장 사각지역 분석(서울시) ②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입지 분석(서울시) ③ 화재 취약지역 분석(서울시 동작구) ④ 보육취약지역 분석 (서울시 동작구) 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다발지역 분석(서울시 강서구)

표준분석모델은 분석속도와 기능이 고도화된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www.geobigdata.go.kr)"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열람·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정보 분석과 개발이 가능하며, 분석요청 및 활용교육 신청 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국토부, 광주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2개월 간 구성·운영

건설안전과. 2022.01.12.

건축 정책 안전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경상3명, 연락두절6명)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22.1.12~.3.12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1월 12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 관련 규정의 준수 등 기술적 검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정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운영

산업교통재난대응과. 2022.01.23.

건축 정책 안전

정부는 1.11.(화)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고용부장관)를 운영하여 신속한 수색활동 등을 지원하며,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를 긴급 교부하여(행안부→광주시), 탐색·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국토부·고용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1.21.~)을 구성하여, 안전한 수색환경이 마련되면 전국의 구조인력을 가동한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건설사고대응본부(1.13~, 본부장은 1차관)도 중수본에 편제되어 건축물·구조물 안전점검, 현장 수습 등에 대한 검토를 주관하고,

행안부는 근로자 가족과 인근건물 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상담, 구호활동 등 피해 지원을 총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노동부장관)은 1.24.(월) 15시에 이번 붕괴사고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탐색·구조 활동(소방청), 타워크레인 제거(고용부), 붕괴건물 안정화(국토부), 근로자 가족 지원(행안부) 등 관련 상황과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탐색·구조 계획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통합 활용체계 개선 2단계 사업완료

국가공간정보센터. 2022.01.24.

국토 정책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의 통합·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2단계 사업"을 1월 21일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센터는 국가·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다양한 국가 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해왔으나, 공간정보시스템이 상이한 시스템 환경 및 분리된 운영장비 위치에 따른 관리 불편, 공간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함에 따른 정보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기반 마련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 2022년도 토지정보 주요업무 추진계획 확정

토지정보과. 2022.01.26.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울산광역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실현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2022년도 토지정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토지정책 구현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고품질 지적정보 구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 안정적인 바른땅 사업관리 및 주소체계 고도화 등 3대 방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토지정보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많은 업무이다."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 업무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KT&G Sejong Tower B 8F, Gareum-ro, Sejong-si, 30116, Korea

01
9 772635 514009
ISSN 2635-5140